

대선주자 개헌 권력구조 개편 이견 팽팽

문재인·유승민, 4년 중임제

안철수,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

홍준표, 4년 중임 분권형

심상정, 2020년 내각제 전환

개헌 국민투표 시기와 관련, 여야 5당의 대선 주자들의 의견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야 한다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하지만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시기 등을 놓고는 다양한 의견을 보여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2일 국회 개헌특위 전체회의에 참석,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보도자료 통해 입장을 나타냈으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개헌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개헌 방향과 관련해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며 “차기 대선을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해서, 이 때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주장이 현실화될 경우, 차차기 대선은 2022년 6월에 열리게 된다. 아울러 문 후보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내용도 개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특히 “새 헌법 전문에는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의 정신을 새겨야 한다”고 강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오른쪽) 당 대표 겸 국민주권 상임 선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시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개헌을 선언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왼쪽)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했다. 아울러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 시행 ▲모든 장관 임명권에 있어 국회의 동의 의무화 ▲감사원 회계감사 기능의 국회 이관 ▲국가인권위의 헌법 기관화 ▲국민발안·국민투표·국민소환 강화 등도 개헌 내용으로 소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 내에 대통령의 개헌 의견을 작성할 개헌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운용하겠다”며 “9월 정기국회 개헌 전 개헌 의견을 완성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적절하다”며 “개헌 이전 반드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의 내용과 관련해선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권력구조 개편의 3가지를 꼽았다. 특히 안 후보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권한축소형 대통령제와 이

원집정부제 두 가지에 가능성을 열었다. 또 대통령 인사권 축소, 장관급 이상 국회의 동의, 예산 통제력 강화, 감사원 회계감사 부분 국회 이관, 대법원장 호선제, 국민투표 범위 확대, 국민 발안제 및 소환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도 개헌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대웨이 중국 한반도 특별 대사와의 면담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비롯해 국회를 양원제로 개편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표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구상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도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고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기관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회는 양원제로 개혁, 국

회의원 정수를 상원 50명, 하원 100명으로 줄이겠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새로운 정부 형태와 관련 “온건 다당제에 기반한 의회 중심제(내각제)로 바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가 전제된다면 분권형 정부형태를 포함해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개헌 시점에 대해서는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로 시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시행 시기는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려면 2022년 5월, 단축한다면 2020년 5월을 제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이날 재보궐 선거 유세 일정에 따라 개헌특위에 참석하지 못했다. 유 후보는 그동안 4년 중임제와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 실시 등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주 만에...김종인, 대선 불출마

“향후 아무 역할 안해”

더불어민주당 탈당,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통합정부를 구성해 목전에 다가온 국가 위기를 극복해보겠다는 대선후보로서의 제 노력은 오늘로 멈추겠다”면서 “저의 호소는 늦었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에는 힘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정부 구성을 통해서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저의 생각을 역광 있는 후보가 앞장서 실현해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불출마를 선언한 김 전 대표가 당장 특검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양강 구도가 계속된다면 경우에 따라 안 후보를 측면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김 전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한 뒤 안 후보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특히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은 지난 15년간 이 나라를 패권적으로 운영한 소수의 책임자들을 제외하곤 모두 힘을 합치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 그런 여론이 조성돼가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강조, 사실상 안 후보를 지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향후 거취와 관련, “나는 아무 역할도 안 한다”며 “김메이커 안 한다는 소리를 수백 번 했는 데 내가 그 말을 저버릴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전 대표와의 ‘3인 회동’ 멤버였던 홍성현 전 중앙일보·JTBC회장의 거취도 관심을 모은다. 홍 전 회장은 전날 한 언론인터뷰에서 “국난의 시기가 만큼, 어떤 형태로라도 나라에 기여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선을 놓고 행보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았다”며 불출마를 시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일자리 시각차 文 큰 정부 vs 安 작은 정부

19대 대선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2일 차기 정부의 우선 과제와 해법을 제시한 자리에서 일자리 해법을 놓고 충돌했다.

문 후보는 이날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포럼 행사에서 “저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로 시작할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책과 재정, 모든 국가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는 나라,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정의를 느끼는 나라를 꼭 만들고 싶다. 국민과 소통하며 개혁과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민주당

문 후보와 같은 입장을 취했지만 정부의 역할은 민간과 기업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해 해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안 후보는 “일부에선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반대의 생각을 한다. 정부는 이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문 후보의 입장을 비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분권형 개헌, 기업 기(氣) 살리기와 강성노조 개혁, 공적적 국영정책을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재벌개혁과 비정규직 문제, 4차 산업혁명 혁신을 꼽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에 박지원·손학규

공동선대위원장은 박주선·정동영·주승용·천정배 선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상임선대위원장에 박지원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공동으로 선임됐다.

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박주선 국회 부의장과 정동영 의원, 주승용 원내대표, 천정배 전 대표가 임명됐고, 외부인사로는 지난 4·13 총선 당시 국민의당 비례대표 추천위원장을 지낸 천근아 연세대 의대 교수와 한국비트코인거래소 김진화 코빗 이사가 영입됐다.

선대위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선대위 인선을 발표

했다. 호남 출신이 대부분인 국민의당 의원 40명 대부분이 선대위에 포진했다. 국민의당은 선대위를 ‘국민선거대책위원회’, 약칭 ‘국민캠프’로 명칭을 정했다.

이날 발표된 인선안에 따르면 3선의 장병완 의원이 총괄선거대책부장을 맡아 전체 실무를 지휘한다. 김성식 의원은 총괄선거대책 부분부장을 맡는다.

총괄본부장 산하에 9개의 본부가 설치됐다. 총무본부장은 김삼화 의원이, 조직본부장은 유성엽 의원이, 정책본부장은 김관영 의원이, 홍보본부장은 김경진 의원이, TV토론포럼본부장은 이용호 의원이, 미디

어본부장은 김영환 최고위원이, 뉴미디어 본부장은 이연주 의원이 각각 맡고 전략본부장은 총괄본부장인 김성식 의원이 겸임하기로 했다.

종합상황실장에는 김광수 의원이, 비서실장에는 최경환 의원이 임명됐다.

대변인단은 전날 발표된 대로 수석대변인 손금주 의원에 김유정·김재두·김경록·김근식(정책) 대변인 체제다. 공보단장에는 표철수 전 경기도 정부부처사가 선임됐다.

인재영입위원회는 이찬열 의원이, 대외협력위원회는 박준영·이동섭 의원이, 재외선거대책위원회는 이상돈 의원이 각각 맡는다. 공명선거추진단장은 이용주 의원

이, 특보단장은 김동철·김중로 의원이, 미래준비본부장은 오세정 의원이 선임됐다.

선대위는 프로젝트별 플랫폼 조직으로 8개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 황주홍 의원, 시민사회위원회 위원장에 박주현 의원, 외교연안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이태규, 문화콘텐츠위원회 위원장에 장정숙 의원 등을 배치했다.

외부인사로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에 조영달 서울대 교수, 좋은일자리위원회 위원장에 최영기 한림대 교수, 문화미래 준비위원회 위원장에 엄용훈 삼거리피쳐스 대표·장기호 서울예대 음악학 부장 선임됐다. 평화로운한반도본부 본부장에는 최상용 전 주일대사,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공동으로 임명됐다.

상임고문단으로는 권노갑·정대철 상임고문과 정경환·김옥우 고문이 포함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제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약법무법인 자산]

- 광주시 광산구 남산동 733-1, 733-6
 - 토지 : 총 1,370㎡
 - 용도 : 주거지 1층 건물 철거조건
 - 6억5천만원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대리 587-27외 3필지
 - 토지 : 총 5,524㎡
 - 용도 : 주거지 2층
 - 8억3천만원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579-49외 3필지
 - 토지 : 총 866㎡
 - 용도 : 나대지
 - 2억5천만원 (교환가능)

경매, NPL채권 배우면서 투자 가능하신 분 3명 모집
(2017년 3월 6일 ~ 2017년 3월 30일 까지)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